

## 고향(후루사토) 납세 제도의 활용 전략

- 아베 총리는 고향(후루사토)납세제도 절차를 간소화시켜 이용자를 증가시킴으로써 지방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
- 일본정부는 고향(후루사토) 납세에 의한 도시-지방 간 세수 격차 해소를 통해 대도시 집중과 인구 감소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전략

### □ 고향(후루사토) 납세 제도란?

- 일본의 「고향(후루사토)납세」는 본인이 현재 살고 있는 곳과 다른 지자체에 기부했을 경우 일정 한도 내에서 세금 공제 또는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제도
  - 고향(후루사토)납세 제도는 '08.4.30에 공포된 「지방세법 등 일부 개정 법률」에 따라 개인 주민세의 기부금 세제를 크게 확대할 목적으로 도입
  - 「후루사토」는 고향을 의미하는 단어지만 기부를 하는 지자체는 본인 출신 지역일 필요는 없고 한 번에 여러 지자체에 기부할 수도 있음
  - 기부금에서 2,000엔을 초과하는 금액이 소득세와 주민세에서 차감되지만, 소득에 따라 감세 한도액이 정해져 있다는 점에 주의할 필요
- 기부를 하면 지자체의 농민 등이 혜택을 받거나 지역진흥을 목적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기부 금액에 따라 지역 특산품 등을 선물로 받을 수 있음
  - 제도 도입 초기는 선물의 종류도 적고 선물을 주는 지자체도 많지 않았으나 최근 선물의 질이 높아져 제도를 활용하는 사람이 증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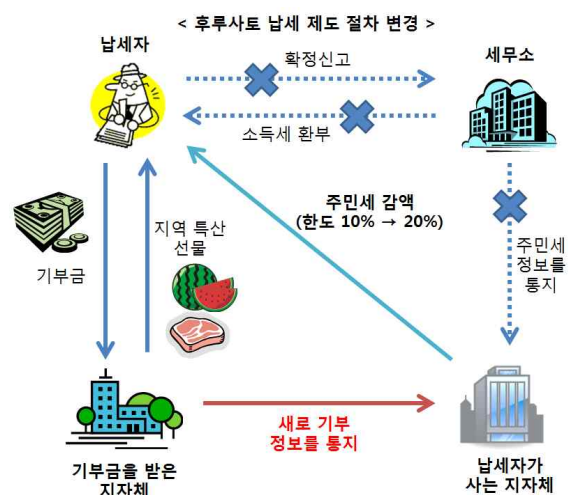
< 각 지자체 주요 선물(예) >

지자체	선물	기부금액	지자체	선물	기부금액
돗토리현 고토우라쵸	쌀 2kg	3,000엔	홋카이도 미카사시	스키장 리프트 사용료 50% 할인(1년간)	5,000엔
미야기현 게센누마시	샥스핀 세트	10,000엔	시마네현 니시노시마쵸	전복 1kg	30,000엔
효고현 미타시	쇠고기 1.2kg	50,000엔	홋카이도 가미시로호쵸	양고기 1마리분 (25~30kg)	200,000엔
시즈오카현 니시이즈쵸	나만의 불꽃 놀이	1,000,000엔	야마가타현 마무로가와쵸	지자체장 업무 경험(하루)	1,000,000엔

- 선물로는 고기, 해산물, 쌀과 같은 식료품이 인기가 많지만 최근에는 실제로 기부한 지역을 방문할 수 있도록 온천, 골프장 등 시설의 이용권, 여관·호텔의 숙박권을 제공하는 지자체도 증가
  - \* 스쿠버 다이빙, 캠핑, 산림욕 등 체험형 관광을 PR하는데 후루사토 납세 선물을 활용하는 지자체도 잇달아 등장
- 하지만 최근 지자체 간 선물을 둘러싼 과도한 경쟁이 일어나 원래 기부금의 목적에서 벗어나는 경향이 보이고 있어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있음
  - \* 일부에서는 이러한 경쟁을 통해 지방이 활성화한다는 의견도 있으나 아직 일본정부가 나서서 경쟁을 자제시키는 상황은 아님
- 기부금을 교육, 관광 진흥, 스포츠·문화 진흥 사업 등에 지정하여 사용하도록 납세자가 선택할 수 있는 점이 평가 받고 있음
- '08년 3만 3149명이 72억 5665만 엔을 기부하였으며 '12년에는 납세자 10만 6446명, 기부금 130억 1127만 엔으로 증가
  - \* '11년에는 동일본 대지진으로 기부금이 대폭 증가, 74만 1677명, 649억 1490만 엔 기부

## □ 납세 절차의 간소화 및 아베노믹스와의 관계

- 고향(후루사토) 납세 시 납세자 본인이 확정 신고를 해야 하는 등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에 납세를 주저하는 사람도 많았음
- 일본정부는 '15년부터 고향(후루사토) 납세에 의한 세금 공제를 주민세로 일원화하고, 소득세 공제를 위해 필요로 했던 확정 신고절차를 생략, 세금이 감액되는 기부의 한도액도 약 2배로 확대할 방침
- 현재 소득세와 개인 주민세를 공제하는 시스템에서 공제 대상을 주민세로 제한, 감액 한도를 10%에서 20%로 확대



- 일본정부는 지역 활성화 정책의 일환으로 고향(후루사토) 납세 제도의 이용자 확충을 위한 정책을 추진할 계획
  - 아베노믹스에 의한 경기 회복이 대도시 및 대기업 중심에 집중되어 지방에는 충분한 효과가 없다는 비판을 받아, 도시와 지방의 세수 격차를 축소시키는 것이 목적
  - 고향(후루사토) 납세는 도시에 사는 사람이 지방 지자체에 기부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공제 대상을 주민세로 일원화시키고, 공제액을 확대시키면 도시에서 지방으로의 세수 이전을 촉진시킬 수 있음
- 아베 총리는 ‘14.9월 내각 개편을 통해 「지방창생(創生) 담당대신」을 신설, 이시바 시게루 전 자민당 간사장이 취임
  - 아베 총리는 지방의 인구 감소 억제와 지역 활성화를 목표로 한 지방창생 관련 법안을 제출할 방침
  - 「도시·사람·일 창생본부」를 설립하고 인구 감소 및 저출산·고령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향후 50년 비전을 연내에 수립할 예정
    - \* 고향(후루사토) 납세는 원래 2007년 아베 1차 내각에서 제기됐으며 아베 총리도 도시 집중화 해소를 중요한 정책과제로 선정
  - 일부 기업들도 도쿄 집중을 회피하기 위해 본사 기능의 일부를 지방 공장에 이전, 생산부문과 타부문의 연계 강화를 도모
- 한편에서 행정서비스를 받는 주민이 세금을 부담하는 「수익자부담의 원칙」에 맞지 않는 등 고향(후루사토) 납세 제도자체에 대한 비판도 있음
  - 특히 기부하는 사람이 많은 대도시 지자체에서는 세수가 크게 감소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주민은 행정서비스를 받은 지역에 납세해야 한다는 불만을 제기

## □ 시사점

- 고향(후루사토) 납세를 이용하는 사람들 중에는 지역특산물을 선물로 받기 위한 목적으로 기부하는 사람이 적지 않겠지만, 이 제도가 고향 또는 지방에 대한 관심을 제고시켰다는 점은 평가할 수 있음

- 도시 집중, 저출산·고령화 문제는 한일 공통의 과제이기 때문에 아베 내각이 추진하려는 지방 활성화 전략에 관한 정책은 우리도 주목할 필요가 있음
- 우리나라도 ‘10년 고향세(향토발전세) 도입 가능성에 대해 논의가 시작되었지만 무산되었고, 최근에 다시 고향세 도입이 논의되고 있음
  - 고향세 도입 목적은 지역간 세수격차를 줄이고 지역균형발전을 이루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나라는 일본보다 수도권 인구 집중도가 높고 지역 불균형이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제도 도입이 시급한 상황
    - \* 지방세수는 최대 지역(서울)과 최소 지역(제주) 간의 격차가 약 20배(‘12)
  - 일본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지방자치원칙, 지자체간 갈등 등 제도의 부정적 측면을 참고하면서 우리나라 특유의 상황에 맞는 형태의 고향세 제도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

<참고자료>

닛케이신문(2013.12.11, 2014.5.27, 8.13, 9.5), 염명배(2010) “일본 ‘후루사토(故郷)납세’ 제도에 대한 논의와 ‘한국형’ 고향세(향토발전세) 도입 가능성 검토” 한국지방재정논집, 제15권 제3호.